

문 대통령 개헌안, 내일 본회의 오르나

여야, 유불리 계산 나서

정세균 의장, “대통령 자진 철회 아니면 표결” 입장
여 “본회의 출석해 통과토록 주력... 처리 안하면 위헌”
야, 한국당·바미당 외 평화·정의당마저 ‘부정적’

오는 24일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유불리 계산에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진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야당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부결되거나 폐기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을 ‘개헌반대세력’으로 몰아 개헌 무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당청의 술수라는 반발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표결 강행시 포다시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선 공약인 8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자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앞서 발의한 개헌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회견과 만나 ‘자진 철회 여부’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결정된 것도 없다)”라고 했다.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 안보 이슈가 중대해 개헌안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2일 현재까지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표결에 붙여보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부결되더라도 지방선거와 향후 정국에서 ‘호헌세력’ 대 ‘개헌세력’ 간 대결 프레임을 구축해 유리한 국면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 권한에 따라 제출된 헌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방치했다더라

어도 60일 이내 의결하는 규정은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회의에 출석해서 당연히 (개헌안) 통과하도록 주력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60일 안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처리해야 한다”며 “그걸 안 하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 4당 교섭단체 합의사항이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라고 보았다.

정 의장은 지난 21일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자진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개헌안이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2명)의 3분의 2인 192명이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는 118명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7명·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포함)과 정의당(6명)을 설득하더라도

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개헌안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당, 정의당 의원 원내대표는 21일 주례 회동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보다는 (직접) 철회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각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헌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만약 표결이 불성립할 경우 법적으로 ‘계류’ 상태가 된다. /김진성 기자



“조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 서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 중재 외교 ‘시험대’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릎을 맞댄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담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견인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미가 각기 그리고 있는 ‘비핵화 로드맵 퍼즐’을 맞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장소를 옮겨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안전한 ‘징검다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례 없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문턱에서 주저하고 있는 북미 정상상을 회담테이블로 안전하게 이끄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우선 목표라 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목적과 달리 최근 표출되고 있는 북미 간의 이상기류로 인해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성사시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최선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 속의 일부분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한미 두 정상은 6월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 합의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기 위한 2가지 목표만을 갖고 만난다”고 말했다. /뉴스

부처님 오신날... 여야, 화합·상생 다짐

여야는 22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화합과 상생을 다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라며 화합과 상생의 아름다운 불교 정신이 우리 사회에도 꽃 피워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부처님은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연민과 자애를 마음의 바탕으로 삼을 것을 설교했다”며 “분열과 갈등, 반목과 대립이 아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로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시공을 초월하는 부처님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라며 “부처님의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처럼 나와 상대방은 둘이 아니고 곧 하나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개인사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자유가 흔들리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불교는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나는데 늘 앞장섰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자 곧 정치의 소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우리도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며 “세상을 일깨웠던 부처님의 깨달음은 모든 사람이 욕심과 번뇌를 잊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자는 관공과 상생의 정신”이라고 논평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다양한 종파와 이분적 대립을 소용시키고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화쟁 사상은 요즘 정치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정치권도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 했던 공존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화당은 불교의 가르침을 새기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 공존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 세상에 자비의 큰 뜻을 전파하고,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설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며 “또한 차별이 만연해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평등하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평화당, 당론 발의 추진

정동영 의원 “진상규명과 함께 법안 논의 활발하게 이뤄져야”
VPN·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조희수·추천수 등 조작 금지

민주평화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평화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의원의 제안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평화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차원의 발의를 위해 정의당에도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이 당론 발의하는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매·대여·도용하거나 VPN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IP를 우회하고, 매

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조회수, 추천수, 실시간 검색 순위 등을 변경 혹은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다수의 유명 아이디를 동원해 인위적인 역주행을 만들어내는 음원차트 조작을 막기 위해서 멜론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변경,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을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댓글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며 “이번 드루킹 특검을 통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작 행위와 민심왜곡으로 특정 정치세력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